



대형 리스크 보장에 대한 OECD의 논의

오병국 연구위원

요약

최근 OECD 보험 및 사적연금 위원회(IPPC)는 110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재난 및 대형리스크에 대한 보험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음. 본 회의에서 동 리스크 대비 관련 보장공백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① 공·사 협력 강화, ② 신기술 적용, ③ 재보험시장 활용, ④ 보험 및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제시됨. 우리나라 정부와 보험회사는 향후 대형 리스크 보장공백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이러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

- OECD 보험 및 사적연금 위원회(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Committee; IPPC)는 2022년 12월에 110차 회의를 개최하고, 글로벌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함
 - 특히, IPPC 사무국 및 회원국은 대재난 및 대형리스크 관련 재정적 보장공백¹⁾ 관련 주요 회의 안건에 대해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고, 보장공백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민영보험 및 재보험의 역할에 대해 토론함
- 전 세계적으로 홍수, 지진, 테러, 사이버공격, 전염병 등 대재난 및 대형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,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재정적 보장공백은 계속되거나 증가할 수 있음
 - 대재난 및 대형 리스크에 대한 재정적 회복력(Resilience)을 구축하고, 보험을 통한 재정적 보장을 확대하는데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
 - 다만, 전 세계 가계 및 기업이 각종 재난 리스크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율은 여전히 높으며, 이러한 경우 재난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축, 부채 및 재정 지원에 의존해야 함
 - 1995~2019년 기간 중 홍수 손해의 약 82%, 지진 손해의 약 87%, 폭풍 손해의 약 49%, 사이버 손해의 약 85%, 코로나19 관련 영업 중단 손해의 약 97%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지 못함
- 보험은 대재난 및 대형 리스크로부터 가계, 기업 및 국가의 재정 상태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, 각 경제주체의 재난 리스크 관련 보장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 - 재난 리스크 대비 보험에 가입한 가계와 기업은 재산 손상을 복구하고, 생계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이점을 가질 수 있으며, 동 보험 적용 수준이 높은 국가는 재난 발생 시 더 빨리 복구할 수 있음

1) 재정적 보장공백은 질병, 사망, 재해 등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경제적 상황 변화가 발생했을 때 기존 상황을 유지하기에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으로 정의될 수 있음

- 재난 리스크 관련 보장공백 완화에 기여하는 보험의 순기능에 불구하고, 각 경제주체의 실제 보험가입이 미흡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 - 가게 및 기업의 경우 보험 구입비용(보험료)과 보험 구입을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실제 보험가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
 - 또한, 과거보다 재난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,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, 미래에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보다 현재 지출하게 될 보험료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

○ 현재 미국, 일본, 호주 등 주요 국가는 대재난 및 대형리스크에 대한 보험 보장(Insurance protection)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인 재난 리스크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(〈표 1〉 참조)

- 지진, 홍수, 사이클론, 테러 등과 같은 특정 위험에 대한 민영보험회사의 부보가능성(Insurability)을 고려하고, 민영보험회사가 수요 또는 공급 이슈로 포괄적 보험 보장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공·사 협력 기반의 재난 리스크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
-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보험 보장, 제도설계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존재함
 - 국민들의 재난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보험을 통한 보장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
 -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높게 설정되는 문제가 있고, 적정보험료 산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가 부족함

〈표 1〉 주요국의 재난 리스크 보장 프로그램 운영 현황

국가	프로그램	프로그램 운영 현황
미국	국가홍수보험	• 1968년부터 시작된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은 홍보 부족으로 가게 및 기업의 보험 가입을 충분히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함 • 다만, 프로그램을 통해 손실 보상을 받은 가게 및 기업은 홍수로 인한 파산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, 금전적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
	캘리포니아 지진보험	• 캘리포니아 지진보험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, 다른 주(Interstate)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함
일본	지진보험	• 일본은 지진 피해 규모가 커서 민영보험 단독으로 지진 리스크를 부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진 리스크 보장에 있어서 공·사 협력이 매우 중요함 • 지진보험은 재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, 원수보험회사들이 지진 리스크를 재보험으로 출재함 • 의무보험은 아니지만, 보험계약자에게 세제혜택(소득공제)을 주어 보험가입을 장려 중임
호주	사이클론 풀(Cyclone Pool)	• 2022년 7월부터 사이클론 발생 기간 동안 사이클론 및 사이클론 관련 홍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가게, 기업 및 콘도 건물을 대상으로 재보험 풀을 운영 중임 •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원수보험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이클론 풀에 가입해야함 • 사이클론에 대해 중간 또는 높은 피해를 입을 위험지역에 대한 보험료 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간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를 권장 중임
	테러리즘 풀(Terrorism Pool)	• 테러 사건이 보험보장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재보험 풀 형태로 테러리즘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고 있음 • 보험회사가 인수한 테러 리스크에 재보험을 제공하고, 정부는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임

자료: 110차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(IPPC) 사무국 및 회원국 참여 고급 원탁회의를 참조함

○ IPPC는 대재난 및 대형 리스크에 대한 재정적 보장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① 공·사 협력 강화, ② 신기술 적용, ③ 재보험시장 활용, ④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제시하고,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함

- (공·사 협력 강화) 민간부문 경제주체의 재난 리스크 대비 민영보험 가입 증가는 공공부문의 재정 지출 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은 가계의 민영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보장공백 해소를 시도할 수 있음
 - 중산층 이상의 경우 보험료 납부에 대한 세제혜택, 중산층 미만의 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 납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같은 정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
 - 다만, 민영보험회사가 재난 리스크 관련 상품 개발 시 필요한 위험률을 산출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공부문의 데이터 개방 등 협조가 필요할 것임
 - 또한, 민간부문으로의 리스크를 전가함에 따른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재무상태 혹은 재무건전성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규제 및 감독정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음
- (신기술 적용) 보험 판매, 언더라이팅, 클레임 등 업무에 인슈어테크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보험보장 비용을 감소시켜 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음
 - 규제 및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신기술 개발과 혁신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기존의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감독규정을 개정할 수 있음
- (재보험시장 활용) 보험회사가 재난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글로벌 재보험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음
 - 글로벌 재보험시장은 재난 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흡수하여 리스크를 국제적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, 많은 국가에서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제약이 존재함
 - 규제 및 감독당국은 원수 보험회사와 재보험사 간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글로벌 재보험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- (보험 및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) 가계 및 기업의 재난 리스크 대비 보험가입 수요 및 보험 보장에 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하며, 이를 바탕으로 보험 및 재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
 - 정책당국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험상품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
 - 또한, 정부차원의 캠페인 운영을 통해 가계 및 기업의 재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임

○ 우리나라 정부와 보험회사는 향후 재난 관련 보장공백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

- 대재난 및 대형 리스크 대비 민영보험 가입, 재보험시장을 통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가, 리스크 대비 보험 보장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